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A Study on the Current Venture Business Policies and Guide to the Future
Government Venture Policies

김상국(Sang-Kuk Kim), 장선호(Seon-Ho Chang)
경희대학교 산업공학과

I.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성과

- 정부의 적극적인 벤처 기업 육성 정책의 추진
 - 정부는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부처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음. 주요 추진정책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음
- 조세상의 지원
 - 소득세 및 법인세 50%감면
 - 창업 후 2년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면제
 -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 부과세 50%감면
 - 기술 개발준비금의 손비 인정 등
- 금융상의 지원
 - 일반기업 대중금리 대비 현저히 낮은 저리의 대출 (약2%)
 - 창업자금 및 기술개발 자금지원, 기술 담보대출 등
- 보증상의 우대
 - 간이심사 확대 (7억원까지) 및 보증한도 증액 (30억)
 - 운영자금 보증한도 연매출액 1/3까지 상향조정
 - 벤처 발행전환사채 보증제 (투신사 100%, 창투사 70%) 실시 등
- 설립시의 우대
 - 법인설립 자본금을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
 - 대학, 연구소,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 공장등록가능
 - 창업 보육센터,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립지원 등
- 인력상의 지원
 - 교수·연구원의 겸직허용
 - 병역특례 요원의 배정 및 의무종사기간(2년)의 미적용
 - 미상장, 미등록 벤처기업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허용 등
- 기술개발상의 지원
 -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의 추진 등
- 벤처기업 창업의 활성화
 - 전기한 다양한 정부 정책에 힘입어 벤처창업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코스닥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게 되었음
- 벤처 기업의 수는 1998년 말 2,042개사 대비 2.9배 증가한 6,004개사 등록 (2000년 3월말 현재)

표 1 산업별 현황

분야	전기·전자	기계·금융	정보통신	화학·섬유	s/w, 인터넷	건설, 기타
비중	22%	21%	15%	15%	12%	15%

- 다양한 분야에서 벤처 창업이 이루어졌으나 전기·전자, 정보, 통신분야가 48.5%로 가장 큰 비중 차지

< 표 1 > 참조

- 벤처 기업의 특성인 높은 성장성과 기술성을 갖춘 하이테크형 벤처기업이 44%를 차지
- R&D 투자 비율도 매출액의 10%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이 벤처기업 전체의 46.9%를 차지
- 코스닥 시장에서도 벤처기업이 시장 성장을 주도
 - 1999년 말 벤처기업 등록수는 173개로 38%를 차지하였으나, 거래대금 비중은 70% 차지
 - 2000년 2월9일 거래소 거래대금 상회
 - 2000년 2월 거래대금 기준 전세계 8위 증권시장

- 벤처기업의 활성화는 국가 경제발전에 긍정적 효과 발생

- 벤처기업은 기술력, 창의력, 모험정신을 바탕으로 IMF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 수행

- 벤처기업의 GDP 내 비중 4.8% 차지

- 벤처기업의 성공 사례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

- 투명한 경영 문화 및 새로운 노사 문화 전파
- 기존 대기업의 경영에 벤처 정신을 투입
- 나태해 질 수도 있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근무 행태를 제시

- 경제 민주주의 실현

- 젊은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곧바로 부로 연결될 수 있는 최초의 일반적인 기회 제공

II. 주요국의 벤처 관련 정책 비교

1. 미국

- 민간 중심이고, 정부는 민간 투자를 「유인」 하는 역할 또는 인프라 구축 역할 수행

- 정부, 민간, 개인 엔젤간 조화로운 역할 분담

- 주요 특징

	투자원	비중 (%)	투자시기	투자기업	특징
정부	정부펀드	3	초·중기	소	민간투자 유인 목적
민간 벤처 캐피탈	연금기금, 기관 투자가	30	중기 후기	중·대	안정적 투자, 중장기 투자
개인 엔젤	개인, 투자조합	67	초기	중·소	모험적 투자, 단기 투자

- 「전국적 벤처 네트워크(ACE Net)」의 구축

- 투자자와 신생 벤처기업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정부 주도로 구성

- 「잠재엔젤」(실제 투자엔젤의 4~5배 규모 예상)과 벤처기업의 연결 목적

- 대학과 주정부에 속한 8개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

2. 일본

- 정부, 민간, 엔젤 모두 극히 보수적인 자금 운영

- 주요 특징

	투자원	비중 (%)	투자시기	특징
정부	중앙, 지방정부	16	후기	출자 1000여개사 중 20개사만 부도 (1996)
민간 벤처	은행, 증권사	50	중·후기	투자기업 65%가 10년 이상된 기업 융자비중(28%), 투자비중(22%)
개인 엔젤	개인, 투자조합	34	중·후기	주식공개 이후에도 지속적 자금 보유

3. 이스라엘

- 국가주도 벤처정책(Yozma 플랜)의 가장 성공적인 예
- 향후 우리나라 벤처정책의 좋은 벤치마킹 대상
- Yozma 플랜의 주요 특징
 -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공급과 탈 러시아 유태 과학자의 하이테크 산업화 유도 수단으로 시작(1992년, 총 1,200억 원 규모의 투자)
 - 시작 초기부터 국내 및 「국외」 투자자들의 투자 「유도」 목적으로 정부 자금 운용 (이스라엘 정부투자 펀드라는 점을 강조, 투자펀드의 대외신인도 제고)
 - 복수의 중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소수 정예기업에 투자
 - 240억 규모(Yozma 지분 40%)의 10개 펀드 조성
 - 총 15개사에 직접 투자
 - Yozma 펀드 구성 초기부터 민간 이양을 약속하고, 정부 투자지분을 외국 투자 기업에게 「스톡옵션」으로 제시,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활용
 - 1997년, 설립 목적 완수 판단 후 민간에 매각

III. 벤처기업 관련 문제점의 분석

- 벤처 특성을 갖추지 못한 벤처기업의 양산
- 건전하지 못한 벤처문화의 생성
 - 창의와 기술혁신을 통해 회사 고유 사업의 경쟁력 증가를 통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재테크, 금융회사 설립을 통해 부를 축적하려는 무늬벤처, 블랙벤처의 등장
- 일반 중소기업 및 제조업 기반 기업의 소외감
- 벤처 시책의 부처간 조정기능의 미흡 및 유행화
 - 정통부, 과기부, 산자부, 중기청 및 지자

체 등이 산발적으로 시행하는 벤처기업 육성책은 부처간 지원 기준의 상이, 중복지원, 지원분야 집중화 등의 문제를 야기

- 벤처기업에 인력과 자본의 과다 투입에 대한 우려
 - 산업 전반에 그리고 대·중·소기업에 인력과 자본이 고르게 투입되어야 하나, 벤처기업에 인력이 집중 투자되는 경향이 발생
- 창투자 건전성 관리의 문제점
 - 창투자 고유 의무의 수행 여부의 관리 및 건전성 감독의 소홀. 특히 투자분석가의 도덕적 해이 문제 및 투자 자금 지원 방식에 많은 문제점 대두

IV.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

- 벤처 관련 문제점 지적에 대한 의견
 - 문제점 분석시, 지적된 문제점을 「모두」 문제점이라고 인식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의 지양 필요. 이러한 해결 자세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해결 가능한 문제점들의 지나친 과다지적은 어렵게 생성한 벤처 열기를 필요 이상으로 잠재움으로서 건전한 벤처기업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추후 생성 가능한 양질의 벤처기업 탄생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임
- 벤처 관련 일반적 우려에 대한 의견
 - 「벤처기업의 거품 현상」이 있다고 하나
 - 이는 벤처붐 초기 조성단계의 부산물로서 시장의 자율조정기능과 적절한 관리, 감독으로 해결이 기대되며
 - 「벤처기업에 인력·자본이 과다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 이것은 기존 대기업에 「독점」되었던 자원이 벤처기업으로 이동되는

자연스런 현상이며

- 「벤처정책관련 부처간의 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나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및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가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부처별 정책은 다양한 분야의 벤처기업 초기육성 측면에서 바람직함

- 「제조업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 전체 벤처기업 중 69.8%가 제조업 중 사업체임

□ 지적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고찰

미래 벤처 관련 시책의 주요 포인트

미래 벤처 관련 정책 입안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기 실행 정책에 대한 잘못을 분석하고, 그것을 비판(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없는가**」를 주시하여야 할 것임.

- 벤처기업의 기술성 미흡

- 기술력을 갖추지 못한 유사 벤처기업의 등장 등 첨단 기술, 고유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의 상대적 부족

- 벤처기업 안목의 국내 지향성

- 현 국내 벤처기업의 주요 판매시장, 자금원, 투자 대상, 판매시장 등이 주로 「국내」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 모험단계를 지난 벤처기업에 대한 사전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점

- 성공한 벤처기업의 전업화를 위한 유도 시책의 미비
- 실패한 벤처기업의 가치있는 잔존 자원의 활용 대책 미흡

- 이중 특히 벤처 관련 정책 및 시야가 「국내 지향성」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임

- 왜냐하면 「좁은」 국내시장을

목적으로 해서는 향후 벤처기업의 성장에 「명백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신규 탄생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V. 벤처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의견 : 「성장 및 정착화 진입 단계」로의 전환 필요

1. 벤처기업 창출을 위한 기술원천의 확대

□ 미래유망 기술분야로의 벤처창업 확대

- 현재의 인터넷, 정보통신 중심의 벤처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 생명공학·신소재·환경분야 등으로의 확산이 필요하며, 소과정 참여가 곤란한 분야에서도 부분과정에 특화함으로써 단기투자자로 개발 가능한 기술이 존재

□ 기존 전통 제조업분야의 첨단 벤처화 유도

- 섬유, 자동차, 기계분야에서도 「차별화」된 기술 또는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제조업기반의 벤처 창출

- 문화상품, 장난감, 게임, 농수산물의 유통 등도 디지털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벤처창업 유도

□ 벤처기술 원천의 글로벌화

- 기술은 있으나 벤처기업화하지 못한 해외기술의 발굴·도입을 통한 벤처기업 창출을 위해

- 러시아 등 기술잠재력이 큰 국가를 대상으로 유망기술 조사를 추진
- 이와 병행하여, 대학·출연(연) 등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 지원하고 벤처기업화 성공시 실질적 투자수익 보장 등 특별 인센티브 제공

- 해외 벤처펀드 파트너를 활용한 해외기술의 국내 도입을 활성화

- 해외합작파트너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 필요기술의 해외 아웃소싱 및 해외 신규 기술의 벤처화에 참여

- 개발된 기술의 벤처기업화를 위한 여건 조성
 - 대학 및 정부출연(연) 등 공공기관 보 유기술의 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 연구자에 대한 기술 무상사용, 벤처기업 성공시 기술료 수입 등에 관한 인센티브제 확대 등을 포함한 정부의 지적재산권관리제도 개선
- 「기술거래소」를 통해 신기술과 특허기술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술개발 의욕 및 『잠재』 벤처기술인의 저변 확대

2. 벤처 기업의 국제화 전략

- 벤처 캐피탈 경영에 선진기법의 도입
 - 벤처기업의 「국내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선진 벤처기술의 벤처마킹이 중요하며, 특히 「외국 벤처 펀드와의 합작 유도」는 큰 의미가 있을 것임
- 외국 합작 펀드 조성시의 기대효과
 - 벤처자금의 지원 이외 벤처기업 성공에 필요한 선진 경영기법의 자동 이전
 - 국내 벤처 상품의 「해외 마케팅 문제」 해결의 도움
 - ; 해외 마케팅은 국내 벤처기업들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이점에서의 해외 파트너의 도움은 벤처기업 성장에 가장 귀중한 자원이 될 것임.
 - 성공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선별안의 체득
 - ; 「묻지마 투자」 열풍의 후유증 해결과 140여개 투자펀드 중 절반 가까이가 휴·폐업하는 현 상태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선별안 체득은 큰 의미가 있을 것임
 - 해외 벤처기업에의 직접 투자 기회 마련
 - 벤처기업 및 벤처펀드들의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s) 방지
 - ; 벤처 기업의 도덕적 해이는 건전한 벤처기업 발전에 큰 제약 요인이 되고 있으며, 해외 파트너와 합작 펀드 조성은 벤처기업 및 펀드의 도덕적 해이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임.
 - 해외 자금과의 합작펀드 형성을 위해서

국내 벤처 펀드에 정부자금을 투자함으로써 국내 펀드의 해외 신인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벤처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의 적극 유도
 -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외 현지에 민간주도의 「벤처기업 국제화 센터」를 확충
 - 국제화 센터에서는 해외 현지 마케팅의 지원, 필요기술의 현지 중개, 통역·번역, 법률 및 회계 서비스 제공 등 해외 진출 벤처기업의 「One-Stop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육성이 필요함.
 - 그러나 국제화 센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센터장의 현지인 채용 등 센터 운영의 「현지화」 및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한 민간주도 운영이 성공의 최대 관건이 될 것임
 - 국제적 「집단」 세일 활동의 유도
 -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개별 기업의 해외 세일은 현실적으로 실행이 거의 불가능함
 - 정부 산하 기관 (예: KOTRA) 이 중심이 되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상품 보유 기업들의 집단적 동시 세일활동은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진출 대상국의 불필요한 경계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벤처 펀드의 해외 파트너에게 「스톡옵션」 등을 제공함으로써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활용 필요
 - 공공벤처자금 운영의 차별화
 - 민간벤처자금이 풍부하게 조성되어 있으므로, 공공자금의 새로운 역할정립이 필요
 - 벤처의 「국제화」 지원, 장기연구 필요분야, 기존제조업의 벤처화 및 국내 벤처펀드의 대외신인도 제고 등에 투자
- ## 3. 모험 단계 이후(Post-Venture)의 벤처기업 육성
- 성공한 벤처기업의 「세계 일류 기업화」

유도

○ 기업간 흡수 합병 및 전략적 제휴의 유도

- 벤처기업의 성공은 「끊임없는 진화」와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상호 보완관계의 형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그러므로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벤처기업간 또는 기존 굴뚝 산업과 벤처기업간의 흡수 합병(M&A) 및 전략적 제휴를 유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벤처기업 지원 졸업제도」의 도입

- 「벤처기업 졸업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일정기간 또는 일정요건 충족시 정부의 조세 및 금융 지원을 축소·폐지함으로써 기존기업으로서의 벤처기업 자생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임

○ 전문 고유 영역 이외로의 업무 영역 확대 억제

- 기업의 경쟁력은 집중화를 통해 얻어지는 것임. 그러므로 초창기 직후 고유 영역 이외 분야로의 업무 영역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것은 벤처기업가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음

□ 실패한 벤처기업의 잠재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활용

○ 마케팅 면에서 실패한 벤처기업일지라도 가치 있는 경험과 기술, 인력 또는 장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벤처기업에게 적절한 가격을 받고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임

○ 이를 위해 기존 벤처기업 종합 정보망인 「Venture Net」 또는 「기술거래소」 전산망을 실패 벤처기업의 잔존 가치 정보가 거래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조치는 구매 기업에게는 저렴한 비용의 자원 구득, 판매기업에게는 투자 자본의 적절한 회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련인 모두에게 윈·윈 게임을 할 수 있게 할 것임

□ 벤처기업의 지속적 창출을 위한 여건 조성

○ 대학의 연구기능과 연계된 「창업보육센터」 및 「첨단기술 연구단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

- 벤처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병역특례의 확대·시행 등

○ 지식기반경제를 뒷받침할 디지털 인력 공급의 확대를 통해 급속히 증대하는 벤처기업 인력수요의 충족

- 2004년까지 21만 여명의 정보통신전문 인력 부족 예상

□ 벤처 기업 특성에 맞는 특허제도의 정비

○ 최근 선진국들은 자국의 비즈니스 모델을 국제 특허화함으로써 인터넷 비즈니스에서의 세계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국제협약의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특허권에 대한 현명한 조치가 요구됨. 특히 향후 국제 특허권 분쟁에 대비하고, 특허권 협상시 유리한 입장 확보를 위해 외국의 특허를 내포하는 국내의 개량된 특허권 창출 확대(Patent Flooding)를 고려하여야 함

○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국내 벤처기술의 국제특허 등록에 대한 지원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임